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5·27 촛불행동에 참가하자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3~5면

경제 불황,
문재인 정부,
노동자 투쟁

6~7면

개혁을
기다려야 하나

10~11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할 이슈

- 노동개혁과 일자리위원회 7면
- 미세먼지 대책 8면
-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미 정상회담 2면

전교조를 인정하라

12면

재벌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9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김영익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첨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증액분만 해도 한국 국방예산보다, 북한 GDP(국내총생산)보다 많다.

올봄에 트럼프의 군국주의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돌 만큼 긴장을 일으켰다. 북한 '위협'론을 부각시켜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추가 배치하는 등 긴장을 높였고, 그 틈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 했다. 항모 칼빈슨 호가 동해로 진입할 때 사드가 성주로 반입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사드 배치 외에도 트럼프는 한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 공식화 같은 동맹 강화, '사드 10억 달러'로 대표되는 군비 분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 아마도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한 트럼프의 여러 요구를 받아 오게 될 것이다. 진보·좌파가 문재인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이용해 "한반도 위기 해소의 돌파구 마련하라"고 (비현실적으로) 주문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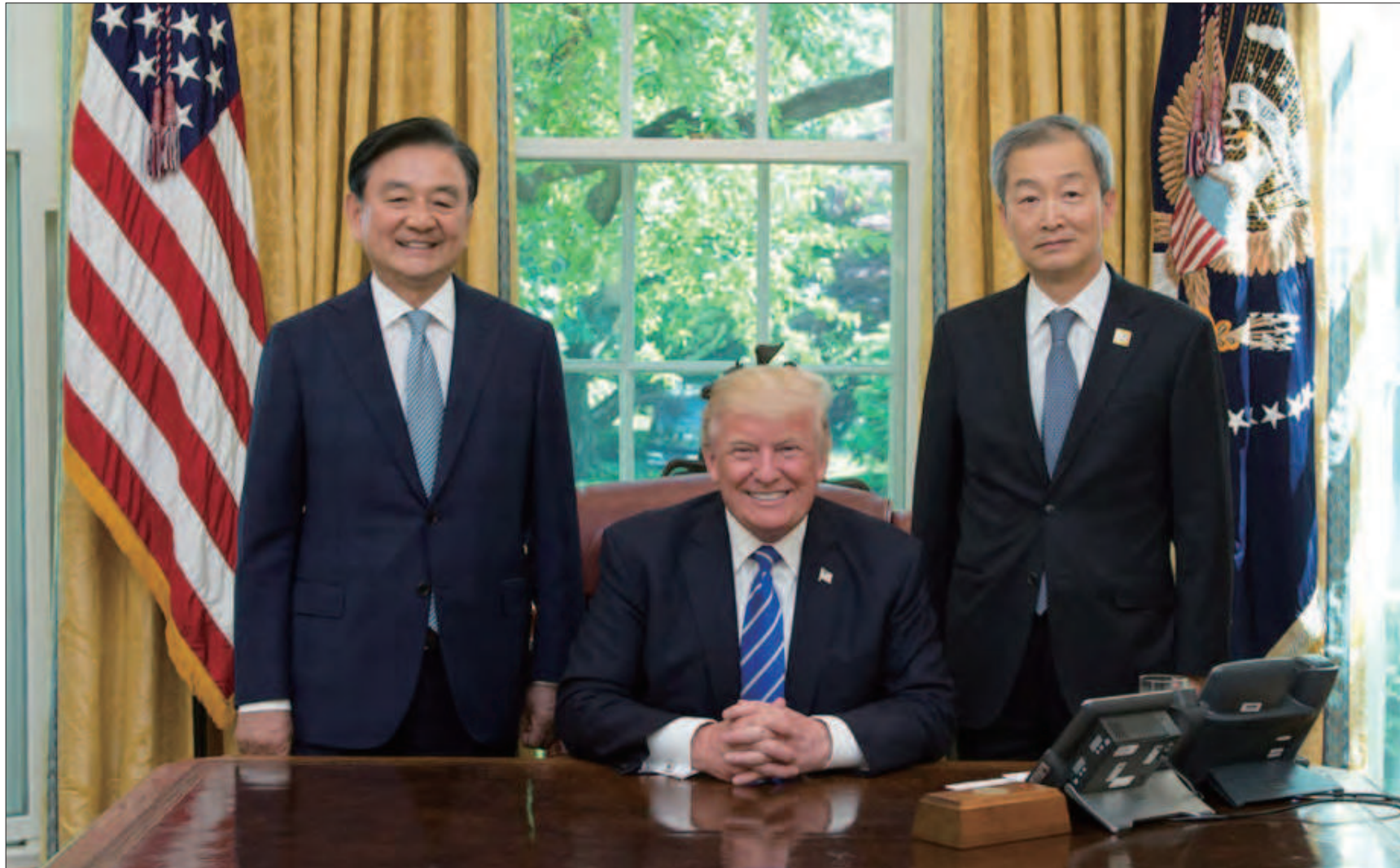
현재 트럼프가 대선 때보다는 중국을 향해 덜 위협적으로 말하지만, 머지 않아 미·중 간 긴장 악화 상황은 재발될 것이다. 미국의 군국주의에 관한 중국의 대응이 지속·강화되는 등 핵무기 경쟁까지 포함한 군비 경쟁이 악화돼 왔고, 미국·일본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긴장 재발을 예고한다.

러시아도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과거 북한과 일본을 오가던 북한 여객선 만경봉 호가 이제 북한 라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정기 운항한다.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는 러시아가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틈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러시아는 북한을 서방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고, 러시아가 중국과 별개로 한반도에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북·러 관계만 봐도, 이른바 '신냉전론'보다 현 동아시아 질서가 훨씬 더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반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집권했다. '안보 위기'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이 받는 압력이 매우 크고, 내부 견해차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중국을 피도록 자국하고 싶지 않아 고심하겠지만,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할 것이다. 그 자신이 '한미



문재인이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에 타협할 것을 경계하라 트럼프를 만나 문재인의 친서를 전달한 홍석현

동맹은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망설일 테지만, 결국 성주에 들어온 사드 배치를 인정할 것이다. 문재인이 대미 특사 홍석현은 미국에 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한 해결"도 언급했다. 결국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은 채, 타협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들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을 강하게 반대하지만, 설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더라도 이는 배치를 사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이라크 파병 모두 국회 비준을 거쳐 노무현이 실행한 배신 행위였다.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뤘던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돼 기대감이 일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서 조금씩 후퇴해 왔다.

대일 특사 문화상은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파기가 아니라 제3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기본으로 한다면, 군사적 문제와 경제 협력 등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다. "미래 지향"은 역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접고 한·일 유착을 강화할 때마다 동원한 용어다.

문재인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특정한 상황"이 될 때에야 남북 대화를 하라는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 그간 강화돼 온 대북 제재 구조 때문에 문재인이 공약인 개성공단 재개조차 만만치 않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다.

게다가 문재인은 미국 특사단을 만나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합의했다. "모든 수단"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 즐겨 쓰는 특수 용어다.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이 늘 포함돼 있다. 따라서 문재인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대북 군사 압박 강화에 협력한다는 얘기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도 문재인이 미국과의 합의로 대북 정책 면에서 "명백히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을 두고 서재정 교

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최대의 제재를 가해서 '대화'의 장에서 북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면 외교도 아니고 대화는 더욱 아니다. 협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기조 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남북 관계 속의 모순에 봉착해 좌충우돌할 것이다.

경고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민중의 바람을 결국 배신할 것임을 일찌감치 경고하고, 정부의 본질적인 친제국주의·친군국주의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미국의 군비 분담 압력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공언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군비의 대폭 증강은 정부의 노동자 공격 시도와 뚜렷하게 대비될 것이다.

근래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국방 정책에 반대하는 데 앞장서 온 것은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었다. 성주·김천 현지의 주민 운동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주민 운동만으로는 중앙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저지하는 데까지 힘이 미치기는 어려웠다.

서울에서 주요 진보 단체들은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드 반대 운동 내에서 굳건한 행동 통일을 하지 못했다.(집착하겠지만 그 근본에는 북핵 문제에 관한 첨예한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주요 진보 단체들은 이 문제의 '정치적 해결', 즉 국회 설득에 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기회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좌우 양쪽에서 불만족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때로 남북 대화나 교류·협력으로 노동자 운동의 시선을 돌리려 할 테지만 말이다. 정부 안팎에서 지배

계급 성원들이 대외정책을 놓고 논쟁하고 정투를 벌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진보·좌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촉매가 되라고 고무할 게 아니다. 혼수 돌 일도 아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제국주의론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론은 제국주의 문제의 해결이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고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 잠재력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분명 있다. 따라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앞서 설명한 중장기적 전망 하에 지정학적 갈등이 낳을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유럽 정치의 양극화, 브렉시트, 나치의 성장

★ 브렉시트와 영국 조기 총선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 비자 발급 외면당하는
체첸 동성애자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니다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 지금 당장
가능하다

★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 성주류화 전략 비판
여성운동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강대국간 갈등이 일으킨 해일 앞의 문재인 모순투성이 대외정책으로 그 해일을 넘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 철폐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이 글은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 of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록 회복은 제한적이고 불안정해, 2007년부터 위기에 직면하고, 2008년에는 공황에 빠지게 됐지만 말이다. ('위기'와 '공황'의 구분은 고故 김수행 교수에 따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등장했다. 물론 지난달 1일 정부는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호황으로 3월 수출이 13.7퍼센트 증가했고 "4월에도 회복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몇 달 새 트럼프의 경기 부양 약속에 힘입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경기 대 소비자 견해를 보여 주는 지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다수 자본가들이 재빠르게 반응한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실물경제**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1/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겨우 0.5퍼센트 증가에 그쳐 지난 4년간의 추세를 답습했다.¹ 또한 제조업 활동(특히 자동차 판매)이 저하했고, 소매 판매도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감소했고, 소

비자물가지수도 하락했다. 고용 관계 지수도 "실망스럽다."²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한동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주가수익률³이 높아도 기대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인수·합병 활동도 감소한 걸 보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 재무부 발행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인 2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또한 IMF는 만일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이 경기는 부양하지 못하고 재정 적자와 차입 관련 재무비용이 증가한다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거의 4조 달러의 자산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 정부가 설사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한들 빈부격차가 하도 심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토마 파케티에 따르면, 미국인 하위 절반의 세전(稅前) 국민소득 비중은 1980년 20퍼센트에서 오늘날 12퍼센트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퍼센트의 비중은 12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했다. 실질소득으로 말하면, 하위 절반 국민의 경우는 조금치도 늘지 않은 채 저조했고, 상위 1퍼센트의 경우는 갑절 이상(205퍼센트)이 늘었다. 최상위 0.1퍼센트 국민의 경우는 6백36퍼센트가 늘었다.⁴



조이로비출용 기자

세계 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책은 없다

세계 자본주의는 루카치의 제자인 이쉬트반 메사로쉬가 말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⁵ '구조적'이라 함은 경제의 세계화와 일국적(국민) 국가 사이의 기존 모순 심화가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구조적 위기의 증상을 일부만 열거하면 이렇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방향 정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모순 속에 갇혀 있음;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유럽연합 와해 전망;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부상;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국주의 부상; 그리고 물론 세계경제의 계속되는 침체 전망.

매우 잘 알려진 마르크스주의자와 급진주의자의 일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구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케인스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마르크스주의자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규칙들 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는 새로운 뉴딜," 말

하자면 좀 더 "시혜적인 '뉴딜' 제국주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한다. 비록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⁶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인 뒤메닐과 레비도 케인스주의를 정치적 대안으로 여긴다.⁷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급진주의자 나오미 클라인도 케인스가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공공의 부를 공동 관리하려" 노력해 그의 사후인 1950년대에 선진국의 케인스 학파는 "눈부신 성공담을 뽐냈다"며 거들 케인스를 우호적으로 거론한다.⁸

그러나 1930년대 초에 뉴딜과 케인스주의는 효과가 없었다. 사실 1930년대 내내 서구의 지배계급들은 경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조건, 즉 경제 위기를 통해 비효율적인 자본들이 파괴돼 시스템이 정화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1937~38년에 다시금 심각한 공황에 빠진 사실이 이를 잘 예증한다.



마침내 군국화가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소련과 일본과 나치 독일이 서방보다 먼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세계경제가 이윤율을 회복하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된 건 제2차세계대전으로 무기 생산이 급등해, 자본의 유기

적 구성 증가율이 완만해지면서였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이윤율은 급등했고, 이 높은 이윤율이 전후 장기 호황의 선행 조건 구실을 했다.

그러므로 메사로쉬 말대로 "구조적 위기에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구조적 변화는 "가장 격렬하거나 폭력적

인 경련도 배제될 수 없다."⁹

전후 장기 호황이 붕괴하던 1970년대 초에 미국 등 서구 정부들은 케인스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래서 1976년, 맨 먼저 영국 노동당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건과 대처 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다. 이를 두고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가 계급의 전면적인 반격"이자 "계급 권력을 되찾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했다.¹⁰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 추진은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자유주의적 중도파 정부가 시동을 걸고 이명박근혜 같은 강성 우파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세계 차원에서든 한국 차원에서든 변화가 충분히 '폭력적'이지 못했던 탓인지 구조적 위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 4, 5면으로 이어짐



동해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호

사진: 미 해군

개혁주의가 성장하겠지만, 동시에 그 “지도력의 위기”라는 문제가 있다

이 격차를 매우고자 각종 개혁주의 세력이 달려들고 있다. 이 격차를 다양한 개혁주의 세력이 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그 지도력의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난다. 가장 최근 사례는 시리자이다. 하지만 정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다양한 기층 투쟁에서도 트로츠키가 1930년대에 말한 노동계급 “지도력의 위기”는 거듭거듭 입증되고 있다. 물론 트로츠키는 개혁주의 “지도력의 위기”만을 말하지 않고 스탈린주의, POUM 같은 중간주의, 스페인 아나키즘 등 노동자 정당 일반의 “지도력의 위기”에 대해 말했다.

독일 혁명 패배(1923년 10월) 1년 뒤에 출판된 트로츠키의 《10월의 교훈》이 “지도력의 위기”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다. 트로츠키는 독일 혁명 패배의 주된 요인이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들의 준비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패배의 결과는 재앙이었다. 노동자 운동이 붕괴했고, 파시즘 운동이 성장했다. 오늘날 《10월의 교훈》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구조적·유기적 이 돼 있고, 지배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더욱 쥐어짜려 하고, 핵무기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서구에서 우익 포퓰리즘과 파시즘이 등장하는 한편, 우파 정권이 부패 스캔들로 무너지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부상하고, 여성 운동이 부상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할 것임이 거의 틀림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만도, 그리고 한국에서만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투쟁들이 지도력의 불충분함이나 부적절함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은 패배를 겪었던가. 또는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알뜰살뜰 조리차한 음식에 만족해야만 했던가.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인정 공격에 뒤이은 연금 삭감 공격에 대처하는 노조 지도자들과 정치적 개혁주의자들의 회피 또는 기피는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례일 뿐이다. 도대체 그들은 알랭 쥐페 총리의 연금 공격에 저항해 1995년 말 분출한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은 어떻게 볼까? 내가 기억하기로 그들은 당시에 그것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옳게 보고 크게 반겼었다. 20년 새 변한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혁 정부 10년과 매우 보수적인 수구 정부 10년을 겪으며 사기가 저하하고 고달픈 것이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혁한다는 희망을 잃고 오직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시스템을 다소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실용주의와(근시안적 의미에서의) ‘현실주의’에 안주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막간의 해빙이 있더라도 곧 긴장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동아시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 증대되는 미국의 군국주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시험이 될 것이다. 낙방할 게 뻔하지만 말이다.

미국의 남한 내 군국주의는 또다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만들어 냈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 심지어 호사자들이 제3차세계대전 가능성 운운할 만큼 두드러지는 듯하다. 물론 이는 당

장은 과장이지만, 한반도를 놓고 핵무기 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각축전이 미국 대(vs) 중·러 ‘신냉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미국의 권력층 내에서는 중국이 주적인지 러시아가 주적인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우호적인” 듯한 트럼프가 끼여들어 러시아 주적론자들은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군국주의는 미국 국내 정치의 극단적 분열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옛 소련 붕괴 직후 “역사의 종말”(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을 선언하며 도취감을 만끽했던 그 유명한 우파 정치학자이자 헤겔주의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오늘날의 미국을 “실패한 국가”라고 부른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을 가리켜 호칭했던 용어로 말이다. 미국의 정치 체제

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잘 조직된 엘리트 계층들이 자기네 이익을 지키려고 지난 수십 년 새 비토 정치(vetocracy: 경쟁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가리키는 후쿠야마 자신의 신조어)를 이용하는 바람에 퇴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후쿠야마는 심지어 “우리가 한 세대 전의 공산주의 붕괴와 비교될지도 모를 정치적 붕괴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문재인의 개혁은 더 첨예한 정치적 양극화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와 외교의 난관에 직면해 결국 문재인 의 어정쩡한 중도 개혁은 좌우의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그는 처지가 어려워지면 연립 정부를 제안할 것 같다. 아마 내년 지

방선거 이후 개헌 시도와 맞물릴 것 같고, 국민의당이 우선적인 제안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력하면 심상정의 정의당에도 제안할 수 있다. 비록 제안의 우선순위에서 국민의당에 밀리겠지만 말이다. 만약 뒤늦게라도 정의당에 연립

제의가 공개적으로 행해진다면 심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정의당은 내용을 겪을 것이다. 받아들이면 당내 좌파가 반발하고, 안 받아들이면 참여계 등 당내 우파가 반발할 것이다.

우리는 정의당의 연립정부 참여에

매우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 자체가 배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심상정을 지지한 사람들은 홍준표의 급부상과 사표 논리에 의해 압박 받으면서도 대부분 멀리 보아 진보 정당이라 해서 정의당을 지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양당 정치 바깥에서 도전이 들어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로 사면초가 신세가 될 때, 그때는 한국의 공식 정치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기성 양당 체제의 와해로까지 나아갈까? 미국의 트럼프는 기존 양당제 바깥의 아웃사이더를 대표한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좌파 지도자 제러미 코빈이 기존 양당 구도의 아웃사이더여서, 노동당 주류인 당내 우파의 견제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우익 포퓰리스트 정당 영국독립당이 기존 양당제를 위협했지만,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해 보수당이 우파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프랑스에서는 나치인 마린 르펜이 급부상했지만, 좌파적 개혁주의자 장뤽 멜랑송도 부상했음을(아깝게 1차투표에서 탈락했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경제신문사는 《프라이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런

가 하면 강준만은 《도널드 트럼프: 정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출판했다.¹² 한편, 독일의 <디 차이트> 2016년 10월 16일치는 이런 제목의 1면 톱기사를 실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미쳤나?”

그렇지 않다. 미국인들은 미치지 않았고, 트럼프도 “프라이”가 아니고, 트럼프의 부상(浮上)이 “정치의 죽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빈부격차가 격심하고 소외가 심화돼, 대중에게 절망감과 좌절감, 분노만을 안겨 주는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대중의 그 심정을 대변한다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애먼 대상에게로 분노와 좌절을 돌릴 수 있다. 특히, 이주자나 성소수자, 소수인종 등에게로 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자리 잡은 이제 한국에서도 국가 기구의 통제에서 벗어난 극우 정당이 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더구나 “헬조선”이라는 말이 폭넓은 공감을 얻

는 나라에서 왜 그럴 수 없겠는가?

물론 광범한 대중은 박근혜를 쫓아낸 성공적인 대중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감을 느꼈을지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우리도 정말 “사이다 같은” 사건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퇴진 운동을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다시금 착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20세기 역사를 통틀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핵심 행위주체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이들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특히, 철도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실질적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상징 구실은 한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 파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12월 중순부터는 상층의 개혁주의 지도자들

이 주도성을 발휘한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 힘을 공식 정치에서 대표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의 민주당과 심상정의 정의당이였다.

그러나 20세기의 역사는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자리 잡는 순간부터 그 한계성과 본질이 드러나고, 심지어 매우 빠르게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점도 보여 준다. 1929년 대공황 직후 나치당과 공산당 사이에 양극화된 바이마르공화국의 운명이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구 나라들에서 부상하고 있는 파시스트들의 존재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한다. 경제와 사회의 위기, 지정학적 위기, 기성 정치의 위기 등으로 점철된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이 나라에서도 자본주의의 위기 수준과 노동계급의 정치 의식 사이에 격차가 있다.

문재인 개혁의 시시하고 보잘것없음으로 반드시 우익만이 득 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파시스트나 우익 포퓰리스트는 개혁주의(그리고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 스탈린주의 정치조직들도)의 약점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와 결함을 치고 들어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한국에서는 파시즘보다는 우익 포퓰리즘이 더 전도 유망하다. 역사적으로 정치 운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래지 않아 그의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안겨 줄 것

이다. 그러면 우익은 이 약점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 일면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우익만 득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좌파도 문재인의 약점을 이용해 반자본주의적 노동자 운동을 키울 수 있다.

위에서 필자는 “경제와 외교의 난관에 직면해 결국 문재인은 자기 좌우의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은 확실하다. 하지만 우익만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건 예정돼 있지 않다. 대중 운동이 강력하면 진보·좌파 진영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04년 봄 우파의 노무현 탄핵 시도가 대중항의로 좌절된 덕분에 열린우리당 같은 자유주의 중도정당도 큰 수혜자가 됐지만, 당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도 10석이나 얻으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문재인은 배신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결국 싸울 것이다

세계경제의 계속되는 침체 전망은 문재인이 자기를 지지한 다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배신할 것임을 예고한다. 노무현도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했다. 둘 다 자본주의를 확고히 지키면서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르주아적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은 비교적 덜 부담스런 약간의 개혁 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개혁 조치들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시대도 개혁과 억압이 어설픔게 혼합된 똑같이 모순된 상황으로 점철될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대선 직전에 분출한 대규모 운동의 결과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 운동의 사회적 구성과 성격이 사뭇 다르다. 노무현을 권좌에 올려 놓은 촛불운동은 참가자 대다수가 청년·학생이었고 정치적 경험이 일천했다. 그들은 노무현에 대한 착각과 환상, 기대가 컸고, 대통령 취임 후 두 달도 채 안 된 때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계획을 밝히자 크게 환멸감을 느끼며 급속히 탈정치화했다.

반면 문재인인의 부상(浮上)에 결정적으로 일조한 촛불운동은 세대와 계급을 초월해 민중적(또는 심지어 국민적)이었지만, 그 다수는 (미조직·비정규) 노동계급 소속이었다. 그리고 조직 노동계급(특히 철도노조)이 운동의 초기

고양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러므로 노무현 초기보다 문재인 초기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저항 잠재력에 대해 좀 더 희망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노동계급과 그 지도자들이 견인차 구실을 했지만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 지도력)를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명박근혜의 강성 우파 정부를 10년 가까이 겪어서 인지 문재인에 대한 약간의 환상과 착각,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촛불운동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났고, 이는 분명한 승리다. 승리를 거둔 노동자들이 자기들 덕분에 권좌에 올라선 대통령이 자기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보기만 할 리는 만무하다.

물론 그 투쟁이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없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온건함 때문에 투쟁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쟁의 패배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람시는 이렇게 강조한다. 투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투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는 건 가능하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날 때 혁명가들이 뒹집 지지 않고 그 한가운데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천의 철학[마르크스주의]은 헤게모니의 계기를 요청한다.”¹³



사단법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2017년 2월 25일 17차 범국민행동

맺음말 —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해선 안 된다

그람시는 또한 이렇게 지적한다. “헤게모니의 계기”는 단지 경제와 정치의 위기에서뿐 아니라, 또 단지 좁은 의미의 계급투쟁에서뿐 아니라 윤리적 쟁점이나 지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으로부터도, 또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 문제들과 관련된 논쟁으로부터도 등장한다.¹⁴

몇 달 전에만 해도 집권당이던 정당이 순식간에 쪼개진 상황, 군소 정당인 사회민주주의적 정의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도, 문재인의 동성애자 관련 발언에 대한 항의에도 수백명이 스스로 동원되는 상황은 바로 그람시가 말한 “권위의 위기”,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위기는 “유기적 위기”이므로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으로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¹⁵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는 덕담 행렬에 동참해선 안 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길 바란다”고 초좌파적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잘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설사 잘돼 봤자 한국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을 더 효과적으로, 또 덜 낭비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정부를 격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물론 2004년 우파가 노무현을 국회에서 탄핵했던 것처럼 문재인을 우파가 공격할 때는 우파의 공격을 반대해야 한다. 당시든 지금이든 문재인은 민중주의

자(물론 중도 포퓰리스트)로서 노동자 운동의 일부(물론 온건과 지도자들) 및 시민단체 간부들과 연계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므로 우파를 반대한다는 것은 노동자 및 피차별자 대중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사회주의적 좌파로서 우리의 대의명분이 개혁주의자들의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비판을 필요한 만큼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같은 압축 성장과 고속 산업화가 일어난 사회에서 조직 노동자 운동의 좌파는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문제에는 투쟁적인 자세(노동자주의)를 보이는 한편, 국가 권력과 사회 변화, 다른 형태의 천대 등의 문제에는 민중주의자들의 개념들을 (때로 약간 왼쪽으로 비틀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주의와 민중주의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혁주의 경향이 성장하기 쉽다.(문재인을 무비판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노동운동가들은 과거 한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였으나 지금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심지어 노동당을 지지하며 노조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주의 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해, 개혁주의 정치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때로 급부상)한다.

그래서 필자는 위에서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헤게모니의 계기”는 단지 경제와 정치의 위기에서뿐 아니라, 또 단지 좁은 의미의 계급투쟁에서뿐 아니라 윤리적 쟁점이나 지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으로부터도, 또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 문제들과 관련된 논쟁으로부터도 등장한다.”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흔히 노동계급과 계급투쟁, 혁명적 좌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람시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전제에 해당한다.¹⁶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전략의 전제라는 뜻이지, 천대받는 다른 사회집단의 차별 반대 투쟁에도 전제로 제시될 수는 없다.¹⁷ 입증돼야 할 것을 전제로 제시하는 것은 대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혁명적 좌파는 노동자 계급과 그 일상적 투쟁에 자리를 잡는 한편, 새로운 사회운동, 특히 여성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에 관여해야 한다. 그 리더들이 아무리 배척하려 해도 혁명적 좌파는 여성 운동을 지지하는 다수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민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대세 추수주의는 혁명가의 존재를 무(無)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주

- 1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 소재 연방준비은행의 보고.
- 2 같은 글.
- 3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세후(稅後) 이익으로 나눈 것.
- 4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man,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 tale of two countries’, December 6, 2016
- 5 István Mészáros, ‘Structural Crisis Needs Structural Change’, *Monthly Review*, Volume 63, Issue 10, March, 2012.
- 6 데이비드 하비, 《신제국주의》(한울아카데미, 2005), 197~198쪽.
- 7 제라르 뒤메닐 & 도미니크 레비, 《신자유주의의 위기》, 후마니타스, 2014년, 38, 349, 396~397, 459쪽. 또한 같은 저자들의 《거대한 분기》, 나뭇잎, 2016년, 66~82쪽.
- 8 나오미 클라인, 《쇼크 독트린》(살림Biz, 2008), 30, 76쪽.
- 9 이쉬트반 메사로쉬, 앞서 언급한 글.
- 10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한울아카데미 2007년).
- 11 Francis Fukuyama, ‘America: the failed state’, *Prospect*, January 2017.
- 12 인물과사상사, 2016년.
- 13 *Quaderni del carcere*, Torino, 1975, p. 1404. Antonio A. Santucci, *Antonio Gramsci*, Monthly Review Press, 2010, p. 153에서 재인용.
- 14 같은 책.
- 15 그람시는 “유기적(organic) 위기”와 “국면적(conjunctural) 위기”를 구별한다. “국면적 위기”는 특정 맥락이나 특정 조건들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데 비해, “유기적 위기”는 생산양식이라는 근본적 토대와 관련되고, 특히 “기본 계급들 [가령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지배와 종속 관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유기적 위기”는 위에서 언급된 이쉬트반 메사로쉬가 말한 “구조적 위기”와 대강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16 1919년 6월 21일치 *L’Ordine Nuovo* 신문에 실린 그람시의 논설, ‘Workers’ Democracy’,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s 1910–1920* (London, 1977), pp. 65–67에서 재인용.
- 17 Daniel Bensaïd, ‘Working class, social movement, alliances – and the limits of radical democracy’, 2007년 8월 27일. <http://danielbensaid.org/Hegemony-and-United-Front?lang=fr>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김하영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격심한 공황에 빠진 나라들처럼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 반면 그리스는 심각한 재정 위기와 내핍 강요 속에서 노동자들이 수십 차례 하루 총파업을 하고, 심각한 정치 위기로 좌파적 개혁주의(시리자) 정부가 등장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한국 경제가 더는 이런 행운을 누리기 어렵게 됐다. 이에 더해, 트

럼프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임금 삭감과 고용 축소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업주들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에게 경제 침체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이미 2015~16년 노동자 투쟁에는 이런 양상이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가 199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세 분야의 투쟁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현대차·기아차 노동자들이 비록 제한된 방식이기는 해도 각각 20여 차례 파업을 한 것이다. 쟁점은 임금 불만이였다. 현대차·기아차 노동자의 임금은 지난 2년 동안 3퍼센트 가량 떨어졌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그리고 은행과 보건의로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74일간이나 파업을 했다. 이것은 2014년 방만경영 해소와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은 공격에 맞선 것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조선업 위기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대중국 수출에 의한 완충효과도 줄어들면서 전에는 그러저럭 보호받던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위협받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넘기기 위한 구조조정과 임금 공격 등은 지속될 것이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 다른 나라 경제모델을 들먹이는 것은 부도난 어음으로 돌려막는 꼴이다

문재인의 “사람 중심 경제”는 속빈 강정

경제 침체 중의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흔히 정치적 요인들이다. 순전히 가능성으로만 보자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노동자 투쟁의 전개 양상에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나는 변화된 정치 상황을 이용해 투쟁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은 이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은 지난해 봄 총선 결과로 드러난 반박근혜 정서와 지난해 겨울 박근혜 퇴진운동의 주요 축이었다. 비록 노동자들이 고용의 경제적 힘을 동원해(특히 파업) 투쟁하지는 않았지만, 퇴진 운동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노동자들은 값진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다.

다른 하나는 새 정부가 개선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면서 상충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집권 초기인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9년이 너무 악몽 같았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상징적인 조치나 그저 위안의 말에도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그가 봉착할 여러 난관이 있지만,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는 결코 만만한 조건이 아니다.

이에 문재인은 “사람 중심 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은 속빈 강정이다. “공정과 혁신, 통합의 길”이 부제인 이 경제 비전은 기업 활동과 정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완전히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사람 중심”은 또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주장의 근간에는 전과 달리 새로운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접근에 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래서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 등에 접근할 기회를 국가가 제공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숙련노동일수록 고도의 생산수단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또, 신기술이 개발되면 고용이 늘기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 문재인식 경제 비전으로는 노동에 대한 기계설비류의 투자 비율이 높아져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와 이윤율 위기로 나아가는 경향을 결코 막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주장도 과장이다. ‘스타트업’은 신생 벤처중소기업을 뜻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벤처와 지식기반경제 열풍이 불었다가 오래지 않아 거품처럼 사라졌다.

한 나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흔히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다른 나라 경제모델로 돌려막기를 하려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1970~80년대에 먼저 경제 위기에 빠진 영국 등지의 개혁주의자들이 아직 건재해 보이던 독일과 일본 경제모델에 눈을 돌리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알 듯이 1990년대 독일과 일본 경제도 위기를 피할 수 없었고, 그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자 노동조건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연안정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 양보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은 《성장과 행복의 동행·이용섭의 한국 경제 바로세우기》(2013)에서 경제가 성장과 분배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독일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으뜸으로 꼽는다.

그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벌개혁(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공정 행위 규제)과 중소기업 지원에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재벌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며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용섭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도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해서는 재교육·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섭은 “높은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그와 함께 “소득의 안정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이 “황금 삼각형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연안정성”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황금’ 모델이 아니다. 박근혜가 고용률 70퍼센트와 노동개혁의 전거로 삼은 네덜란드 모델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유연안정성”을 보장하는 좋은 모델인 것처럼 처음 소개됐다. 하지만 박근혜 덕분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그 본질을 잘 알게 됐다.

이용섭이 성공 사례로 제시한 독일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더 나빠졌다. 네덜란드 바세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가 아니라 연대 투쟁이다

나르 협약이나 독일 하르츠 개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확대한 노동개혁이었을 뿐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공정”과 “평등”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을 펴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 자본주의》(2014)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5)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 “공정한 분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부의 분배가 아니다. 그는 복지 예산 확대가 현실성이 없다고 늘어놓은 뒤, “복지를 통한 재분배”보다 “분배의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장하성이 말하는 “분배의 불평등”은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불평

등”을 말하는 것이다.

장하성은 이 “분배 불평등”의 해결 방안 하나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 분배의 몫으로 분배”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는 노동계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라고도 했다.

장하성은 부의 불평등보다 소득 불평등이, 그중에서도 임금 불평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불평등이라고 강변한다.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비할 바 없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뻔한 목적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시선을 임금 격차 쪽으로 유인함으로써, 불평등 완화의 재원을 자본가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노동자들끼리 나누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 7면으로 이어짐

▶ 6면에서 이어짐

노동조합은 문재인 개혁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비전 공약을 보든,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 책임자들의 지론을 보든 오랫동안 불만이 누적된 노동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했듯이, 정규직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비정규직의 처지는 더 나빠지게 마련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것이 정규직 보호 조항을 약화시킨 나라들의 한결같은 경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비교적 명백하다 해서 노동자 투쟁이 자동으로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노동운동의 경험을 보면, 우파 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노동개악 정책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해 관철시키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 6월에 취임한 영국의 히쓰 보수당 정부는 고소득 노

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소득정책’을 추진하다가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1974년 퇴진했다. 하지만 뒤이어 집권한 노동당 정부도 다시금 ‘소득정책’을 내놓았다.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논리로 포장했을 뿐, 보수당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들이 노동당과 “사회계약(협약)”을 맺어 이를 지지했다.

그러자 전투적 노동운동가들도 노동당의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침묵했다. 이를 거슬러 투쟁했던 선원들과 소방수들은 고립 속에 패배했다. 임금 억제가 계속되자 1978년 노동자들의 분노는 마침내 “불만의 겨울”로 폭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환멸을 낳은 노동당의 배신은 대중의 환멸로 1979년 대처 집권을 낳았다.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은 지배계급을 위한 강력한 충격 흡수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자 투쟁을 자제시키거나 어느 수준 이하로 통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빈부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는 ‘강하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노조의 미덕으로 강조한다. “무협영화나 캠페 세계”가 그렇듯이 “힘을 쓰지 않는” 것이 “고수의 경지”라는 것이다. 그는 북유럽 노조들이 “임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한다며 이는 “항상 수출경쟁력에 신경을 쓰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류의 주장은 노무현의 실패를 노동자 투쟁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와 함께 노동조합 운동을 향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가 있다. 노동조합이 결집하면 투쟁에 나서기를 그만두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친노 인사 유시민은 “집권 초기 화물연대 파업[부테] 분위기가 영겼고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 투쟁을 거쳐서 싸움이 끝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악몽 같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집권하면서,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노동

계보다 경제계가 더 세다”며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집권한 정부가 너무도 당연한 노동기본권과 학생 인권 보호 요구를 악몽으로 여겼다는 것 자체가 그 정부의 본질을 보여 준다.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면 노무현은 취임 3개월 만에 ‘힘센’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비난했다. 그리고 “손배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더니 철도 파업에 97억 원 손배를 청구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했다.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 주겠다”더니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았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금세 환멸로 바뀐 것은 당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 노동운동 안팎에서 ‘이번에는 정부를 투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금세 널리 퍼졌다. 노동이 ‘개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도 한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그에 합

당한 협력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대립각만 세우면 얻어 낼 수 있는 것조차 얻을 수 없다며 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사용했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모토를 다시 들고 돌아온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회통합’이 무엇일지는 뻔하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정우 교수의 표현대로)일 것이고, 그 구체적 형태는 노동자들의 양보일 것이다. 정부는 노동운동 내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이 상당히 퍼져 있는 약점을 파고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노동자들을 인간질하려 할 것이다.

재벌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종속시키려 한다면 경제 침체 시기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다시금 불필요한 환멸과 사기 저하로 몰고 갈 뿐이다.

노동운동은 왼쪽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오른쪽을 향해 불필요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괜한 신기루와 허상을 좇거나 만들어 내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측 당연직 위원 15인(부처 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국책연구기관 3명)과 노동계·재계 등 민간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부는 노동계 몫으로 양대 노총과 비정규직 관련 단체 3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양대 노총에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셋째, 일자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능과 위원 구성을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듯하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은 이 기구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이자 코디네

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참여를 상당히 중시하는 분위기다. 노동계가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를 즉각 되살리기보다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도 이 때문인 듯하다. (물론 문재인은 노사정위 폐지에서 ‘개혁’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말이다.)

핵심 공약 후퇴

일자리위원회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노동계의 상당수 인사들은 꽤 기대를 품는 듯하다. 그러나 본격 가동되기도 전인 현 시점부터 이미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노동공약에서의 후퇴이다. 최근 부위원장 이용섭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68시간 행정 해식 폐기 공약에서 후퇴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즉각 폐기가 아니라 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이조차 기업들을 위한 여러 보완책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 해식 폐기 공약은 문재인이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보완책’을 두어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마저 희석시키겠다는니, 과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공약이 ‘2020년까지 인상’에서 ‘임기 내 인상’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검토 중이라며 후퇴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기업 부담을 고려하면 할수록 개혁의 실속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등 노동정책들은 대부분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들이다.

한편 문재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면서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사실상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한다. 문재인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실제 내용도, 고용은 보장하되 처우 개선은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흘리는 것도 이런 의중을 읽은 것일 테다. 최근 SK브로드밴드도 간접고용 노동자 5천2백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적잖은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 방안이 고용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결국 처우를 개선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서 울지하철 등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직장에서는 이것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유지하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중규직’) 또는 ‘별도 직군제’라는 정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핵심 쟁점 하나인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문제도 진척이 없다. 문재인은 ‘단절된 노동관계 복원’을 위해 이 노조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여전히 노동



울해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부가 ‘설립 신고 반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문제도 결국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일 만에 핵심 노동공약들에서 후퇴하거나 후퇴할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불리한 구조

일자리위원회의 구성도 노동계에 불리하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30인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노동계는 3명, 즉 10퍼센트밖에 안 된다. 물론 아직 위촉되지 않은 민간위원 중 일부는 친노동계 인사로 채워질 수 있고, 내각 성원 중 일부도 ‘개혁적’ 인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도 노동계가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노동계를 배려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은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해 왔고, 최근

부위원장 이용섭도 “사용자와 노조 간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도 양보하고 정규직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마냥 노동자들 편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게다가 사용자들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고, 문재인은 당연히 사용자들의 처지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친노동계 인사 중에서도 ‘대타협’을 주장해 온 매우 온건한 인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들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한결같이 대변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결국 노동계 대표자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양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자를 위한 개혁적 노동정책을 펼쳐 나갈 수단이 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바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장호중

문재인은 당선 6일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정지)’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에 4개월씩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슴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 발표 이후(아직 정지하기도 전인데!)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져 새 정부 입장에서 홍보 효과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하지만 6월은 원래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때다.(그림 2) 생색 내기에는 적기인 것이다.

문재인은 선거 운동 당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공정률이 10퍼센트 미만인 9기는 원점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단비 같은 ‘느낌’과 달리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미세먼지는 고작 “1~2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다(청와대 사회수석 김수현). 먼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8기의 발전량이 전체의 4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2015년 기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실제 전력 소비량에 비해 발전 설비 용량이 크게 늘어 이 정도 발전량을 줄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화력 발전소들은 1년 중 전력 소비량이 가장 낮은 5~6월에는 정비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해 왔다(그림 1).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이 발표됐었다.(물론 폐쇄 시기가 명시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발전소 가동률과 미세먼지 농도 사이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중국인지 한국인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발전소인지 등) 제대로 된 진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함께 요구했다.

물론 화력 발전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고 특히 다른 연료에 견줘 석탄을 태울 때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석탄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스보다 272~2910배나 많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40퍼센트나 된다. 가스 발전은 2013년 25퍼센트였다가 2015년에는 19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줄었는데,(그림 3) 이는 발전 민영화 정책과 연관이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민영화의 일환으로 발전소들이 분할돼 각각의 발전 자회사들이 서로 수익 경쟁을 벌여야

그림1 | 월별 판매전력량 (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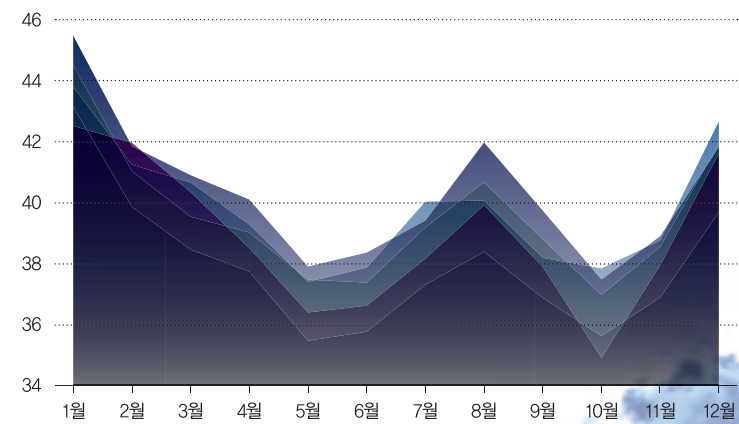


그림2 |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 (μg/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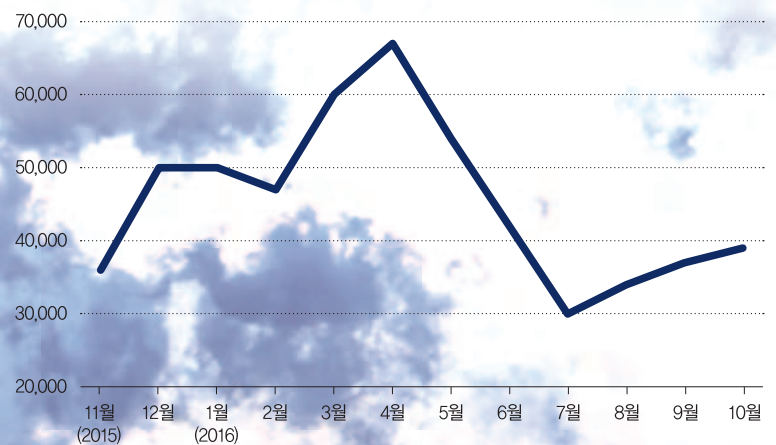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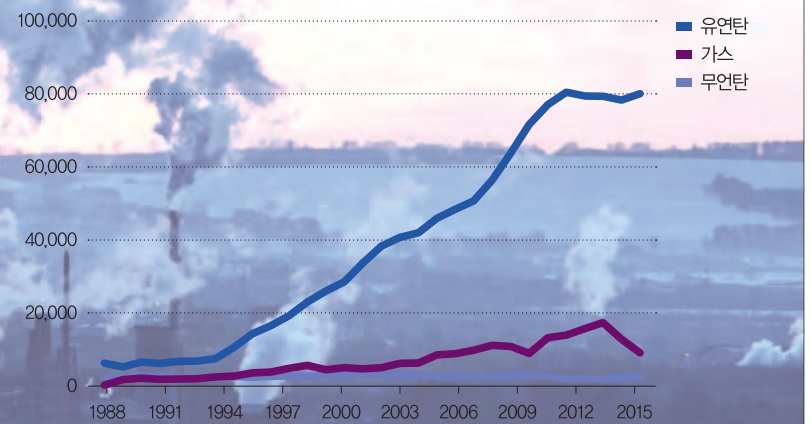


그림3 | 발전연료사용량 추이 (천 톤)



했다. 발전 자회사들은 자연스레 원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석탄 발전 비중을 크게 늘렸다.

다른 한편, 정부가 시장을 ‘개방’해 민간 기업의 발전 사업 진출도 늘었는데, 이들은 건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가동과 중단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가스(LNG) 발전 분야에 진출했다. 2000년대 초 가스 가격 하락도 민간 기업들이 주로 가스 발전에 뛰어든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정부의 예측에 비해 실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석탄 화력 가동률조차 떨어지자 전력거래소는 비싼 가스로 만든 전기를 구입하지 않았다. 가스 발전 기업들은 발전을 멈춰 버렸다. 그럼에도 지난 10년 사이 전체 발전량은 크게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만 크게 늘어난 셈이 됐다. 정확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전기요금

따라서 앞으로 문제는 실질적으로 즉, 남아도는 전력량 이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차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민간에 맡겨 둔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예컨대 전력거래소에서 구입되는 전기는 모두 발전 ‘원가’와 관계없이 가격이 같다. 발전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라는 시장 논리의 일환이다. 그

런데 몇 해 전 정전사태에서 보듯 전력은 전체 사용량보다 공급량이 조금만 적어져도 시스템이 마비된다. 그래서 생산되는 전력 중 가장 비싼 전기가 기준 가격을 형성한다. 여름과 겨울 전기 소비량이 늘고 가스 발전 등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소가 가동되면 전체 전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석탄 등 원가가 적게 드는 발전소들은 폭리를 얻는 것이다. 한전이 최근 몇 해 동안 큰 수익을 거둬 온 배경이다.

이처럼 시장 논리 탓에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치솟고 발전사들만(한전 포함) 배를 불러 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정책 때문에 기업주들은 특혜를 받고 평범한 노동계급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최근 들어 민간 기업들도 원가가 싼 석탄 발전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과 건설 중인 발전소 재검토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한다면 추가 석탄화력 감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 민간 가스 발전 사업자들은 석탄 화력 발전 감축 정책으로 “LNG 발전사들의 조기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 감축 계획은 일부 자본가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발전 사업자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면 LNG 발전소의 발전량을 늘려 보완하고 LNG 발전소 발전 확대를 생기는 생산비용 인상분은 한국전력공사가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그러나 지금의 상징적인 조치에서 더 나아가 석탄 화력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발전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해 수익이 적더라도 친환경적인 발전을 확대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값싼 전기요금 덕에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 온 기업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비용을 충당한다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이익에 민감한 민주당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

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발전 민영화 조치는 이들이 집권한 시절에 추진된 정책이다. 설사 개과천선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협치’를 강조하며 ‘박근혜 경제교사’ 출신의 김광두 같은 인물까지 중용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미세먼지 피해 둘 다를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에 박수 치며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독립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4대강 수문 6개 개방 완전한 복원을 이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5월 22일 4대강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명박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치를 반겼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16개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 떼어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조치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16개의 보 중 6개만 개방된 점, 개방되는 수문도 전면 개방이 아니라는 점, ‘어도(물고기 통로)

보완’ 등 향후 전면 개방이 아니라 부분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 실시 등. 사실상 “상시 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이런 점들을 볼 때 4대강 반대 운동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온 최병성 목사가 『노동자 연대』의 문재인 비판을 두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찬사 일색인 언론들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4대강 찬성론자였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국립대인 한경대 총장으로 추천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의 총장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강동훈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창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등과 함께, 재벌 체제 해체(재벌 개혁)을 주요 요구로 내놓았다.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정권과 유착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온갖 특혜를 얻은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왔다. 이에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역대 정부는 번번이 재벌 개혁을 표방하고 실패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본과 국가가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 기구가 조세 수입을 충분히 얻으려면 기업주들이 노동자로부터 잉여 가치를 원활하게 뽑아 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자본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재벌 개혁을 목표로 삼는 것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설사 만에 하나 재벌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이 재벌 개혁에서 첫째로 꼽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한 경영’이다. 재벌 총수 세습을 타파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가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 구조 개선이나 투명한 경영은 자산 소유자들 사이의 공정·공평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노동자들에게는 득이 될 게 없다. 재벌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주주들의 입김이 세진다고 해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감축하면서 정규직 고용을 늘리거나,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재벌개혁론자들은 민영화된 KT를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모범적인 기업 지배 구조 사례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KT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노동자 수만 명을 해고했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실적 압박으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같은 노동개혁이 KT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재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재벌과 하청기업의 위계적 조직 체계 전체에 맞서야 한다

결국 지배 구조 개혁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재벌 총수 일가 수백 명이 갖고 있는 권력을 금융 자산가 수만 명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 재벌개혁론을 내세운 NGO들이 펼친 소액주주 운동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들도 사실상 주식시장의 큰손들과 외국계 펀드들이었다.

물론 한국의 재벌들은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면서도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는 등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3백 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결과를 보면,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4백73만 7천 명 가운데,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합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1백83만 1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8.7퍼센트에 달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5백 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4퍼센트였지만, 1천~5천 명 기업은 18.4퍼센트, 5천 명 이상은 26.6퍼센트였다.

그러나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찾지 않고, 재벌과 같은 자본의 특정 조직 형태나 소유 구조에서 찾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다. 세계 각국에는 미국식, 일본식, 독일식 등의 서로 다른 기업 소유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기업들도 모두 비정규직을 늘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BMW(베엠베)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전체 노동자 5천5백 명 중 35퍼센트인 1천9백여 명이 파견 노동자이다. 하청 노동자까지 합치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0퍼센트에 이른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아예 ‘오토비전’이라는 파견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그룹 전체에 1만 4천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도 폭스바겐처럼 직접 파견회사를 설립해, 1만 명이 넘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늘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밝혔듯이, 1970년대부터 이윤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애물은 자본 자체이다.”(마르크스) 전 세계 지배자들이 이윤을 하락을 만회하려고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노동계급을 대대적으로 공격했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심화한 것이다.

불평등은 재벌 탓?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둘째 과제로 밝힌 것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다. 지주회사 규정 강화, 금산 분리 강화 등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원하청 공정 거래,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중소기업부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문제 삼는 재벌개혁 요구는 ‘재벌 같은 독과점이 없다면 시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말아 온 사업 부문을 중소기업이 맡는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못되게 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둔 시기에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앞장서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이른바 ‘6대 뿌리산업’을 지원한다며 이 부문에 파견을 허용하려고 하자,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

표한 바 있다.

중소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하청 단가 인하 같은 대기업들의 압박에 때로 반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재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뽑아 내야 하므로 재벌이 드러내는 여러 문제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운동 내에서 재벌 개혁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재벌은 공중에 봉 떠서 민중 전체(중소 자본가를 포함한)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다. 트로츠키의 지적처럼, “인구의 95퍼센트, 심지어는 98퍼센트가 금융자본[독점 자본]의 착취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착취는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다. 착취자-하위 착취자-하위 착취자의 하위

착취자 등등의 식으로 말이다. 이 위계 체계를 통해 최상위 착취자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예측시킬 수 있다.”(최일봉, ‘민중주의의 고차원적 형태, 인민전선이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204호에서 재인용)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재벌 개혁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전혀 비효과적인 투쟁이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비(非)재벌 자본과의 연대라는 뜻으로 노동자들을 이끌기도 쉽다.(그런데 이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적 행동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벌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재벌과 위계적으로 연계된 착취자들의 조직 체계, 즉 자본주의 체제와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이 주요 과제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 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등을 달성하려 해도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맞서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벌의 이윤뿐 아니라 소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그들이 서로 단결해서 기업주에 맞서 싸우고, 다른 기업과 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연대하는 것, 그리고 이 역도 성립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부문을 초월해 계급적으로 단결하는 것을 통해 과감하게 자본주의 국가와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지름길처럼 보이는 다른 길은 실은 새길일 뿐이다.

일상적인 시기에 좀 더 흔한 패턴은 이렇다. 잘 조직돼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재벌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에 고무받아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투쟁에 나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김문성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기도 하고, 잘만 수렴하면 공식 정치 내 경쟁자들을 제압할 동력일 수도 있다. 이 둘 사이에서 문재인은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일단 취임 2주 만에 세월호 참사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기용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추가로 밝히고 왜곡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아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기치로 대중의 열기를 정권의 동력으로 수렴하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 덕분에 문재인이 초기 국정수행 지지율은 80퍼센트가 넘어 역대 정권 중 상위에 속한다.(1987년 이후 취임 초 지지율이 가장 낮은 건 당연히 박근혜였다.)

그런데 높은 기대치는 정권 초기에 민중이 다양한 개혁 요구들을 저마다 내놓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의 다수가 미조직 노동자들이었고, 운동을 이끈 주요한 축이 노동운동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경제·안보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박근혜가 대내외적으로 떨어뜨린 국가적 위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가령 윤석열의 서울지검장 기용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재판 때문인데, 이 문제는 지배자들의 위신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정권의 입지와 더 관계 있다.

계급 문제

노동계급에게 박근혜 적폐 청산은 그 이상을 뜻한다. 그런데 전교조 범의노조화를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문재인 청와대는 그럴 계획을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국무총리 내정자인 이낙연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학자이기도 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노동부의 행정처분만 취소하면 될 일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 인정은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 소위 '시민권 회복'에 관한 것이다. 전교조는 가장 먼저 박근혜 퇴진 요구를 하고서 해직 등 징계 위협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박근혜 쫓불의 알맹이인데, 새 정부 아래서 단순한 기본권 회복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



▲ 2017년 노동절 행진(서울)

▶ 드디어 수갑 차고 재판에 나온 박근혜



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언급했던 문재인이 일본에 특사로 보낸 문화상은 위안부 합의 해결의 “제3의 길”을 언급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의 10대 공약에서는 ‘재협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홍석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기본 기조로 천명한 이상, 일본과의 선린 관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동맹의 연장선이 동북아의 한미일 동맹이기 때문이다.

불법적 노조 탄압을 자행한 사측의 대리인을 한 박형철을 반(反)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폐 청산’(부패 척결 또는 사회 정의)의 정치·사회적 의미가 다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지지자들이 노동운동과 그와 연계된 좌파들에게 신경질적 공격을 퍼붓는 것은 이런 문재인 개혁의 (본질적) 성격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의 합격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합격선을 낮춰 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개혁의 양적 차이나 시간에 대한 인내심 문제가 아니라, 목표와 지향의 차이 문제다. 그리고 계급 문제인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적 개혁

5월 21일 발표된 경제·외교 인사도 문재인 개혁의 성격을 보여 주는 듯하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한겨레〉 비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사의 약점을 거론하는 주류 언론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동연이 아무리 ‘흙수저’ 출신이라 해도 그가 한 행적들을 노동계급 운동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그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지휘 아래 참여한 ‘비전 2030’ 문서는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며 선제적 FTA 체결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그 결과는 약화될 대로 약화된 노무현 정부의 남은

지지층마저 등돌리게 만든 한미FTA 추진이었다. ‘비전 2030’은 한미FTA 추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대화와 토론을 중시했다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전격적으로 추진했고, 그에 대한 저항에는 물대포로 답했다. 나중에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그때 등용한 김현종을 참여정부가 발탁한 고급 인재라고 칭찬했다.

이 ‘비전2030’ 문서의 50대 핵심 과제에는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공무원연금 개혁 계획도 담겨 있다. 이는 이 문서를 주도한 ‘변양균 라인’의 관료들이 전통적으로 국가 예산을 다뤄 온 이른바 ‘경제기획원’ 출신인 점과 관계 있을 것

이다. 지금 이 라인의 주요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경제 부처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경제부총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정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의 소액주주 운동도 결국 기업 경영이 주주들의 이익에 맞춰지고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20년 동안 주주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당해 온 노동자들에게는 뭐가 개혁인지 모를 인사로 씩 반기기 힘든 것이다. 그는 고려대 경영대 학장 시절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두 배 올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결국 학생들의 항의로 말을 거둬들였다.)

비겁한 거짓말, ‘친노 왕따론’

그동안 민주당과 유시민, 문재인 등 친노 정치인들은 우파의 압력뿐 아니라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의 투쟁도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스스로 자초했다. 노무현 정부에 좌우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했던 때는, 노무현 정부는 의식적으로 우파와 기업주들과 한편이 되기로 선택했다.

가령 2004년 노무현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탄핵 반대 여론은 노무현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자 연대> 같은 급진 좌파도 탄핵을 우파의 반동 공세로 보아 탄핵에 단호히 반대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 실패하자, 더 분명히 우경화했다. 그해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강행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악안을 마련했으며,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평택 미군기지 합의 등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노무현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고, 2006년 한미FTA 추진, 국민연금 개악, 비정규직 개악 입법 등을 끝내 추진했다. 바로 이런 노무현 자신의 선택 때문에 대선자금 차떼기 수사와 탄핵 역풍으로 찌그러졌던 우파가 사기와 지지를 회복한 것이다.

즉, 좌파가 우파와 함께 노무현 정부를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기업주·우파와 손잡고 노동계급 대중을 공격한 것이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지지층이 정권에 등을 돌리고 그 중 일부가 저항

에 나선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다수가 2007년 대선에서 투표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환멸로 2007년 대선은 1987년 이후 대선 투표율이 가장 낮을 해였다.)

노무현 정부의 의식적 선택으로 자신감이 오른 우파와 기업주들은 정부에 더 많은 우경화를 재촉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에 타협할수록 지지자의 이반과 왼쪽에서의 반감은 더 강경해졌다. 오죽하면, 이명박 집권 초기 ‘노명박’이라는 평가까지 나왔겠는가.(이런 강경함은 이명박의 우익적 정책에 맞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 자유주의 야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전략(전략적 ‘야권연대’)이 유행하면서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과거를 반복할까 봐 하는 걱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최근 <시사인> 천관을 기자의 기사다. (“새 시대의 첫차’가 출발했다”, 505호, 5월 18일)

그는 이 기사에서 우파의 “적폐 청산이나, 국민 통합이나” 하는 “가짜 질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합의 기반이 넓은 이슈를 다루는 전장에서는, 과감한 공세가 통합을 오히려 촉진한다”고 정부에 조언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슈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 … 조세 개혁, 복지 자원 배분, 연금 개혁 등도 속성이 비슷하다”며 이런 쟁점에서 “적폐 청산하듯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쟁점들의 개혁은 뒤로 미룰 것을 조언한다. 이 쟁점들을 선불리 건들면, 우파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2007년, 노무현의 비정규직 악법으로 인해 파업에 나섰던 이랜드 노동자들

이런 논리가 다다른 논리적인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좌파와 노동운동도 이런 문제를 초기에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지지 세력이 정권 초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같은 전통적인 친민주당 언론까지 겨냥해 비판하는 것은 이 친민주당 포퓰리스트 언론들이 좌파와 노동운동에게도 가끔 우호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진영 일부가 반세누리 연합정치의 향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반면, 영악한 친노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재빠르게 정권 방어 태세로 전환한 셈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난처함을 겪을 수 있는 쟁점들에서 선제적으로 비판을 차단하는 공세를 벌이는 것이다.

누구보다 박근혜 퇴진을 바랐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홍준표 지지율이 지역에서 50퍼센트 넘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선 직후 비

난을 받은 것이나, 민주노총과 정의당, 노동계급 중심성을 표방한 좌파들이 비난의 초점이 된 것은 시사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기가 높은 정권 초기에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그나마 진정한 개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대중은 경험으로 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기다리라”는 말은 개혁의 지체가 아니라 대중의 기대와 다른 종류의 개혁 추진임이 곧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자들 스스로 개혁을 쟁취해야 한다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진정한 방향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데도 진보정치 지도자들 일부가 마치 ‘정신적 여당’이나 된 듯이 덕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안타깝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나 추혜선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인사에 칭송 일변도로 계속 논평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

물론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행동할 태세는 아닌 듯하다. 끔찍한 9년이 이제 막 끝났고, 부수적이지만 퇴진 운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정권이니 지금 당장은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며 요구를 삭감하고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주장들은 노동계급 스스로 자기 요구를 위해 행동하며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일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을 얻을 수 없다.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자회사 고용 방안이 ‘정규직화’라고 불리는 것은 명백한 후퇴다. 이런 유순한 태도는, 기껏해야 노동운동의 목표 달성 실패로 끝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사회적 대타협주의의 재현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좌파는 영국 노동당 개혁주의의 1백년 역사를 돌아보고 내린 영국 사회주의자 고(故) 토니 클리프의 다음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아래로부터 쟁취한 개혁은 계급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미래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위에서 선사한 개혁은 수동성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시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억제할 수 있다.”

17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7

7.20(목) - 7.23(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참가신청 marxism.or.kr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웹사이트에서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조합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했고(또는 더 커졌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번 교사대회는 새 정부에 교육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6월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폐와 교육체제 전면 개편 등을 촉구하고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낙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비판도 금물이다. ...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 개혁을 이뤄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5·27 교사대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지도부 농성, 노조 전임자 중심의 선봉대 투쟁, 6·30 사회적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가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조처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 노동자들이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난해 열린 전교조 결성 27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교조 인정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지만,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 상태다. 탄압도 여전히 벌어진다.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지난해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전임 신청자 16명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적 권리의 심각한 제약이자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다. 전 민정수석인 고(故) 김영한 씨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재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교사의 단결권조차 불허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이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는 박근혜 퇴진 촛불이 제기한 10대 과제의 하나였다. 이런 정서를 반영한 듯 문재인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법외노조 문제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폐'에 찬성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재합법화가 추진되리라는 보도에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교과서 철회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과 달리 전교조 재합법화는 사회적 여론이 좌우로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재합법화가 거론되자 우파 언론들은 대법 판결, 법 개정 이전에 “전교조 합법화를 (행정명령만으로) 무리하게 추진 땐 역풍” 운운하며 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물론 법외노조 철폐조차도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은 집권 초기 개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사드, 대북정책, 노동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벌써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정부는 결국 우파들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문재인에게 법외노조를 당장 철폐하고 해직자를 복직시키고, 각종 제도적 불이익을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새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나아가 문재인은 박근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말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의 힘 덕분에 출범한 정부는 (우파와의)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과 개혁에 우선순위를 뒀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권학교 폐지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특권학교다.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고교 평준화가 해체됐고, 고교 서열화가 강화됐다. 자사고의 다수가 집중된 서울에서는 일반고 슬럼화가 큰 문제가 됐다. 특목고, 자사고는 입시명문고, 상류층 학교다. 2015년 자료를 보면, 1천명당 서울대 진학자 수가 일반고는

3.6명인데 건국, 특목고는 43.5명, 자사고는 31.4명이다. 등록금도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싸고 기숙사비, 방과후 수업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웬만한 대학 등록금 뺀친다. 문재인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려면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필수다.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가 실시한 대선 교육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 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박근혜는 근무평정(인사)과 성과급 평가(보수)를 융합한 ‘교원업적 평가’를 도입해 교사 간 경쟁과 통제를 한층 강화했고 성과급의 격차도 더욱 크게 벌렸다. 이 때문에 교사들 간의 협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적경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실적 쌓기로 교육 활동이 왜곡되기도 한다.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성과급에 반

대하면서 균등분배를 조직해 왔다. 올해는 균등분배와 더불어 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을 조직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성과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당장 차등 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고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성과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교원평가의 일방적 도입이나 중복적 요소만 비판할 뿐, 제도 자

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 통제를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성과연봉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등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제동이 걸렸을 뿐이다. 성과급은 김대중 정부가, 교원평가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급 폐지를 실현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꼭 필요하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